

민주당, ‘합당 파일음’ 수면 위로…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중앙위원회서 당헌 개정안 표결
최고위원들, 조국당 합당 반대
정청래 “당원들 뜻대로 하겠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를 계기로 한 동안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 비판 발언이 2일 최고위원회의의 공개석상에서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다음날(3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특히 정청래 지도부에서 1인1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을 지난해 한 차례 추진했다가 이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어,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재평가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가 1인 1표이듯, 당원 투표도 1인 1표가 헌법이 명령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이라며 “1인 1표제는 당원의 85.3%가 찬성하고 있다. 당원의 뜻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1인1표제 당헌 개정과 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연주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국혁신당 합당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이연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정 대표를 거론하며 소모적인 합당 절차를 중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연주 최고위원은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3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관이 되려는 욕망이 분출된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기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김건희 1심 판결에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선 민생개혁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며 답답해 한다”며 “부동산, 설탕부담금 등 민생 중심 정책 메시지들(대통령이) 쉽없이 내는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

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는 거 아닌지 무겁고 식은 땀이다 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되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합당은 정 대표 개인의 결정이었다. 최고위 논의 없이 알방 통보와 전달만 있었다”며 “심한 자괴감을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있다.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합당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가 시작된다”며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시던 시절이 기억난다. 의총이고 최고위고 공개적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며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들의 모든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다. 그 대표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당원께 제안을 했다. 이제 공은 당원께 넘어갔다”고 정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민주당 조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더민초의 대표인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조선 의원들이 ‘합당 논의 즉각 중단’에 의견을 모으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힘·서울시 “민간 중심 공급 전략 필요”

공공주도 주택만으로는 물량 한계
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호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부동산 정책 협의회에서 정부의 1·29대책을 두고 공공주도 주택공급만으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도심 핵심 입지에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대책을 지난달 29일 발표한 바 있다. 규모로 보면 판교 신도시 2개와 맞먹는 물량으로 서울에만 3만2000호를 공급한다.

이날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은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건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와열지구 조항의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개발지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충분한 공원과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 기부채납도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

가 나오는 것을 고려 LTV(담보인정비율) 70%로 확대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이주를 독려하고자 하며, 민간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하여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안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허가 정책의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

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적정 수치고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김민석 “국정 전력투구… 총리 업무 전념”

지방선거 불출마 우회적으로 밝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성공에 집중하고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관련 여론조사 등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까닭이기도 하다”며 “당사자 의사존중이라는 상식과 안정적 국정 수행이라는 대의를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직 국무총리이자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선거를 앞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두고 다양한 정치적 추측과 질문에 접하곤 한다”며 “다만, 꼭 필요할 때는 정치발전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밝히고,

가짜뉴스나 잘못된 보도에는 엄격히 대응하며 총리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와 관련해 “일부 국내의 언론에서(보도한) 쿠팡 압박이 주된 배경이라는 주장과 달리 관세 협상 합의 이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미국 측의 불만 또는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해선 법적 인 문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따라 법대로(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관련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에서 저뿐만 아니라 통상을 협상하는 모든 라인이 사전에 알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메시지였다는 것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추정하기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